



[금융]
 '헤자카드'
 줄줄이 단종
 無조건카드 대세로
 05

	코스피 2927.38 (+0.66)		코스닥 969.92 (-10.46)
	금리 (국고체 3년) 2.033 (-0.020)		환율 (원·달러) 1194.70 (-4.40) (11일)



3000억 빌려준 은행 편입펀드 판매 줄중단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일파만파

단기차입금 1086억 장기 1940억
 우리은행, 1073억으로 가장 많아
 은행 "대출금 회수 무리 없을 듯"

은행·증권사, 편입펀드 판매 중단
 신용등급 재평가, 당국 검사 관심

2215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사태가 은행권까지 번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은행서 빌린 장단기 차입금이 3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과 주요 증권사들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편입 펀드 판매를 중단한 상태다. 향후 신용등급 재평가와 금융당국의 검사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은행권에서 3026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 가운데 잔존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차입금은 1086억 원, 장기차입금은 19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차입금을 살펴보면 우리은행 1073억원, 산업은행 804억원, 수출입은행 250억원, 신한은행 212억원, 기업은행 193억원, 대구은행 100억원, 씨티은행 80억원, 국민은행 46억원 등이다.

은행들의 공통된 의견은 "횡령규모가 2215억원으로 크지만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 상황에는 큰 영향이 없어 대출금 회수엔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3분기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자산은 9407억원으로 부채 6715억원, 자본 2692억원 규모의 회사다. 1000억원 가량의 현금자산과 해외법인에도 14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현금유동이 막힐 일이 없다는 것.

다만 횡령금액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등 이슈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재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신용등급 재평가는 기업 상황이 크게 개선됐거나 악화됐을 경우 진행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신용등급 재평가가 무조건 이뤄질 것"이라며 "회사내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 이슈가 발생하지 않아도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은 그간의 펀드사태(라임·옵티머스) 학습효과로 판매중단에 나서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스템임플란트를 편입한 펀드 총 77종 펀드의 신규판매를 중단했다. KB국민은행은 43종, NH농협은행 29종, 신한은행 18종, 우리은행 5종 펀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각각 15종, 29종의 펀드를 중단했다.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주식거래가 정지된 만큼 편입된 펀드의 수익률 또한 변동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오스템임플란트 종목의 비중 자체가 높지 않아 수익률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 그간의 사례로 주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한 투자보호 조치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2215억원이라는 큰 돈이 계좌로 옮겨지는 동안 눈치채지 못한 은행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법인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자금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거액일수록 은행의 감시가 철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는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태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실 회계 논란과 관련해 회계 감리 착수 여부를 검토했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해 내용이 중요하다는 판단이 되면 감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입장에만 20분… 어르신들 절반은 '끙끙'

Q 르포 百·대형마트 백신패스 도입 현장

11일 10시 30분, 서울시 중구 A백화점 앞 일대 소란이 일었다. 미리 QR코드를 켜둔 사람들은 빠르게 입장할 수 있었지만 전자출입부 명부 앱이 켜지지 않거나 갑작스러운 업데이트에 우왕좌왕 하는 사람도 있었다. 혼란스러운 첫날보다 훨씬 나아졌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30대 젊은 사람도 앱이 늦게 켜져 주춤거렸고 앱을 찾지 못해 직원의 도움을 받는 중년 여성의 뒤에서는 "씨…"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된 둘째날, 현장 혼란은 첫날과 비슷했다. 방역패스를 제시하고 입장하는 사람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 적용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식당·카페 등 중·중형시설을 방역패스 적용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3000m² 규모 이상 대규모 상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했다. 백화점·대형마트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한 후 각계에서는 이를 두고 실효성과 합리성 논란이 일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방역패스가 적용된 백화점·대형마트의 수는 전국 2003개이며 3000m²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을 피한 동네슈퍼 및 중소 마트의 수는 전국 102만개다.



백화점, 마트, 쇼핑몰 등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 적용이 시행된 10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을 찾은 시민들이 방문 등록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둘째 날 현장, 첫째 날과 비슷해 고성에 막무가내 입장까지 '훈란' 노인 대부분 앱 사용 어려움 겪어

"아직 손님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며 "9일 사람이 몰리긴 했는데 방역패스 탓이라기 보단 주말이고 그날이 행사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B대형마트도 방역패스 입장을 두고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직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사이 한 50대 남성은 막무가내로 입장하려다 제지당하기도 했다.

방역패스 확인을 맡은 직원 장모씨는 "마트 안에 딸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들어오려는 사람도 있었고 아까 다른 입구에서 보여줬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었다"며 "노인 분들 중 절반은 QR체크를 위해 앱을 켜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3면에 계속>

/김서현 기자 seoh@

백화점 화장품 매장 직원 박모씨는

'9부 능선' 넘은 쌍용차 매각

채권단 회생안 동의, 운영자금 확보 과제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의 인수합병(M&A) 본계약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됐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막판까지 긴장을 늦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는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M&A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를 전 본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전날 법원에 투자 체결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았다.

본계약 체결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두 달여 만이다.

그간 본 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은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선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됐다.

아울러 쌍용자동차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그릴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본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인수대금인 3048억의 10% (이행보증금 포함)에 해당하는 계약금 납입을 최종 '완납'했다.

양사는 M&A 본계약 체결로 9부 능선을 넘었지만 쌍용차 인수까지 넘어 야할 큰 산이 아직도 남아있다. 바로 채권단의 회생계획안 동의 절차다.

쌍용차 법정관리를 종결 지어야 한

다. 에디슨모터스는 3월 1일까지 쌍용차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관계인 집회를 통해 채권자 및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회생계획안은 쌍용차 채권단 3분의 2가 동의해야 인가가 가능하지만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에디슨모터스의 회생계획안을 굽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인수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해 회생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인수 이후 운영자금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정부, 긴급 NSC상임위 개최 "北 발사에 강한 유감"
- ▲ 靑 "순방 발표 전 야당이 공개, 외교 결례" 野 "적반하장"

- ▲ 이재명, 김만배측 '이재명 지시' 발언에 "왜곡… 마녀사냥"
- ▲ 윤석열 "환기 잘 되는 시설엔 방역패스 미적용 검토"



- ▲ 안철수 "단일화 관심 없다… 권리축 소형 대통령제 개헌 선호" /사진 뉴시스
- ▲ 정당 가입 연령 18→16세로… 정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